



# 현대정치이해

2021년 2학기

---

행정학부

박정호

# 한국의 정치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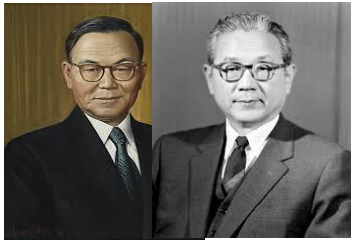
---

- 성리학과 사상적 다양성(외래)
- 정체성과 이론적 정체성 곤경(고유 사상에 대한 의문)
  - 인종, 지역, 법적 기준... “한국인”
- 이론적 정체성과 독자성(정치학의 학문적 발달)
-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권력
  - 계서주의와 권위주의
  - 정부주도의 발전
  - 권위주로부터 민주주의의 발전
  - 대의민주주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과거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한국의 정치 사상

- 한국의 정치:

“오늘 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정의는 공짜가 아니다”



1960

4.19혁명

1972

유신선포

1979

부산-마산  
민주화 항쟁

1987

광주민주화운동  
6.29 민주화선언

1993

군장성  
대대적 인사

1997

IMF  
구제금융

2003

검사와의 대화

광우병  
시민집회

# 1. 이승만 행정부(제1공화국)

- 1945년 해방과 냉전의 시작 (영상1)
- 1948. 8. 15일 대한민국수립 선포
- 제헌 국회
- 남한만의 대통령선거/ 간선제
- 친일청산을 위한 노력과 실패
  - 반민족특별위원회
- 1950년 한국전쟁(6.25) (영상2)
- 1956년 사사오입개헌(3선)
- 1960년 4.19 혁명과 하야 선언(영상3)





# 1. 이승만 행정부(제1공화국)

---

## ■ 정책환경적 특성

- 정치/사회적 혼란기, 정치 투쟁의 연속
- 1945년 노동운동의 폭증
- 이데올로기의 충돌
- 노동운동 → 안보의 위협 → 국가의 통제관행 → 반공과 노동운영

## ■ 국정운영 이념 및 주요 정책 기조

- 반공과 국가안보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
- 사회주의 세력제거
- 노동활동에 대한 억압

# 1. 이승만 행정부(제1공화국)

---

## ■ 국정운영 이념 및 주요 정책 기조

- 한국전쟁 후 경제재건과 북진통일
- 서구식 행정을 표방하였으나, 일민주의, 권위주의적 행정
- 경찰국가적 독재국가

## ■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

- 권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정책
- 전문성이 결여되는 관료집단
- 행정개혁 추진 부재
- 전통적 행정문화와 일제 하 행정관행 답습



# 1. 이승만 행정부(제1공화국)

---

-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
  - 권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정책
  - 전문성이 결여되는 관료집단
  - 행정개혁 추진 부재
  - 전통적 행정문화와 일제 하 행정관행 답습
  - 정부조직도
  - 분화되지 않은 정부부처 및 기능

## 2. 윤보선/장면 정권(제2공화국)

- 1960년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
  - 데모규제법/ 반공법
  - 화폐가치 폭락
- 내각책임제의 도입
- 양원제(상원제/하원제)
- 지방자치제도 도입
- 경제 및 행정운영
  - 지극히 어려운 경제상황
  - 초기 경제(국토)개발계획 수립
  - 약 9개월간 3차례의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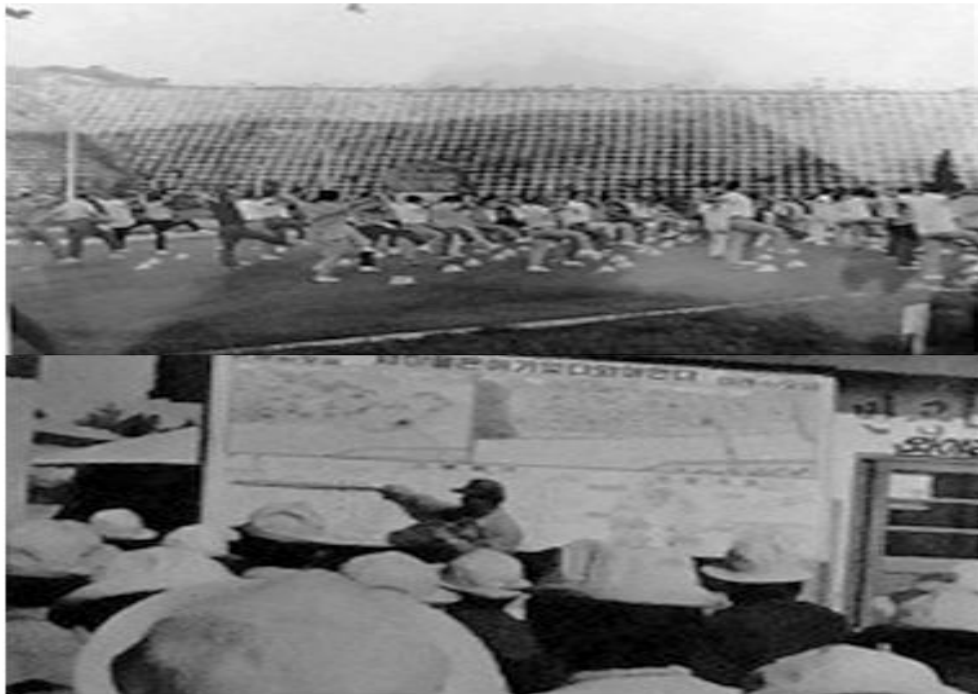
### 3. 박정희(제3공화국)

- 1961년 5.16 군사쿠데타(군사혁명)
-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 혼란의 최소화와 경제발전 최우선
  - 1961. 5.22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해산
  - 노동활동, 노동조합은 부수적인 것으로...
-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 기업을 파트너로 대폭 지원
- '조국 근대화', '경제건설', '국가안보'
- '통제'를 통한 안정화
- 군부엘리트와 기술관료제
  - 국가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법(1961)
  - 중앙공무원교육원



### 3. 박정희(제3공화국)

- 군부엘리트와 기술관료제
  - 국가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법(1961)
  - 중앙공무원교육원(1964)



### 3. 박정희(제3공화국)

---

-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경제개발5개년 계획
  - 민정이양(1963년 12월: 61년 5.16 이후 2년 7개월의 개편작업)
  -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재
  - 미국의 원조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
  - 1962년 화폐개혁 추진, 그리고 실패로 인한 경제 경색국면
  - 외국의 차관을 구하러 노력하지만...
  - 인력 수출을 통해서라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 1964 독일 광부, 간호사
    - 1964 ~ 월남전 파병
- SOC 사업을 기본으로 본격적인 경제산업정책 살리기 정책 추진
  - 국토개발 10년계획(1961~1979): 경부고속도로 건설
  - 경공업 →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 3. 박정희(제4공화국)

---

- 지속적인 경제개발 중심의 정책
  - 1977 수출 100억불 달성
- 시민사회 투입기능 저하(민주화 운동 억제)
  - 1972년 유신선포
  - 1974년 1월 긴급조치 제1호(시민사회/혼란 억제)
- 1975년을 기점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 증가
  - 의료보호법(1975)
  -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1977)
- 관료엘리트체제
  - 정부가 관료를 보호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

### 3. 박정희(제4공화국)

---

- 유신체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
  - 부산-마산 민주화 항쟁 (1979. 10)
  - 부산지역 계엄령 선포(1979. 10)
  -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대통령시해(1979. 10)
  - 김재규의 최후 변론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 4. 전두환 행정부(제5공화국)

---

- 1979년 10.26 사건
-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하나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1980년 3.3 대통령 취임, '체육관선거'(간선제)
-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 사회질서 확립: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 사회불만의 최소화
-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성



## 4. 전두환 행정부(제5공화국)

---

- 경제관료제 존중과 지지(김재익 경제수석: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 거시경제정책과 시장메커니즘을 강조(적정 수준의 규제와 계획)
  - 물가안정 정책: 임금상승은 물가상승 수준으로
  - 컬러TV규제 해제와 대기업의 산업수출 지원,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의 21세기 산업분야 시작
- 1987. 4. 호헌조치(헌법수정 금지)
- 1987. 5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 시위(대학생 포함)
- 1987. 6.29 민주화선언

# 4. 전두환 행정부(제5공화국)

---

## ■ 정책환경적 특성

- 민주화 열망과 탄압 일변도
- 시민사회의 역할 부재, 노동운동 운동의 사회적 투입 약화

## ■ 행정부의 국정운영 이념/정책

- 2차 석유파동(1979~)으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
- 물가안정의 중요성 부각
- 관 주도의 경제 개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 정책결정구조 특징

- 주변 고위관료 및 스태프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외부 전문가 중용
- 입법부의 정부 공조 및 사법부의 기능 부재

## 4. 전두환 행정부(제5공화국)

---

### ■ 주요 정책

- 교복, 두발 자유화, 통금해제
- 프로스포츠 활성화
- 사회악 정화 정책: 삼청교육대
- 사교육 금지정책
- 통화안정정책
- 외환정책
-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정책(중복투자 방지)
  - 발전,조선, 타이어, 중기계, 농기계, 대기업 투자 등
- 86년 아시안게임 개최, 88올림픽 유치

# 5. 노태우 행정부(제6공화국)

- 1987년 6.29 민주화선언
- 1987년 9월 헌법수정(직선제, 국민투표)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
- 1989년 7월까지 ‘행정개혁위원회’ 운영
  - 인권보장, 민간의 자율성, 국제화, 지방화, 부처의 조직개편 등 개혁 추진
  -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
  -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
  -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 변경





# 5. 노태우 행정부(제6공화국)

-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 검거 규모: 2백74개파, 1천4백21명
- 1991년 북한과 UN 동시가입
-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
  -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관계 조성의 필요
  - 화해와 불가침
- 1992년 한반도(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의 개최

전국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단위:명, 자료:경찰청



# 5. 노태우 행정부(제6공화국)

직선제 등에 관한 헌법 개정사항

표 1-1-3 제12대와 제13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제도 비교

구분	제12대 대통령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
선거 방법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국민의 직접선거
대통령의 임기	7년(중임 불가)	5년(중임 불가)
피선거권 (국내 거주 요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제한 없음(거주 요건 삭제)
후보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당원: 소속 정당이 추천</li><li>• 무소속: 대통령선거인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당원: 소속 정당이 추천</li><li>• 무소속: 선거권자 5,000명 이상 7,000명 이하의 추천</li></ul>
기탁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당 추천 후보자: 5천만 원</li><li>• 무소속 후보자: 1억 원</li></ul>
선거운동 방법	3가지(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연설)	9가지(선전벽보, 방송연설, 방송대담·토론,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 표지판, 현수막)
선거비용	국가에서 부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
투표용지 가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시·군위원회: 정당 대리인 2명 가인</li><li>• 투표구위원회: 제1당과 제2당 정당추천위원 2명 가인</li></ul>
투표통지표 교부 임회인	(없음)	정당·후보자 등이 지명한 1인 참여
군인 등의 부재자투표 방법	(규정 없음)	그 시설 안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당선인 결정 방법	대통령선거인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3차 결선 투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a: 496).

# 5. 노태우 행정부(제6공화국)

---

- 노태우 행정부의 정책환경적 특징
  - 시민사회 영역 역할과 투입능력(법제도 변화 영향력)
  - 온건 개혁 지향의 시민단체들이 크게 부상
- 국정이념 이념 및 주요 정책
  - 민주화 및 복지주의
  -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화 추구
  -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여 권력 균형
  - 언론기본법 폐지하여 언론 자율성 신장
  - 정부통제를 중리고 민간 부분의 자율성 신장
  - 공공부문의 민간화/민영화(1990)
    -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외환은행 등

# 5. 노태우 행정부(제6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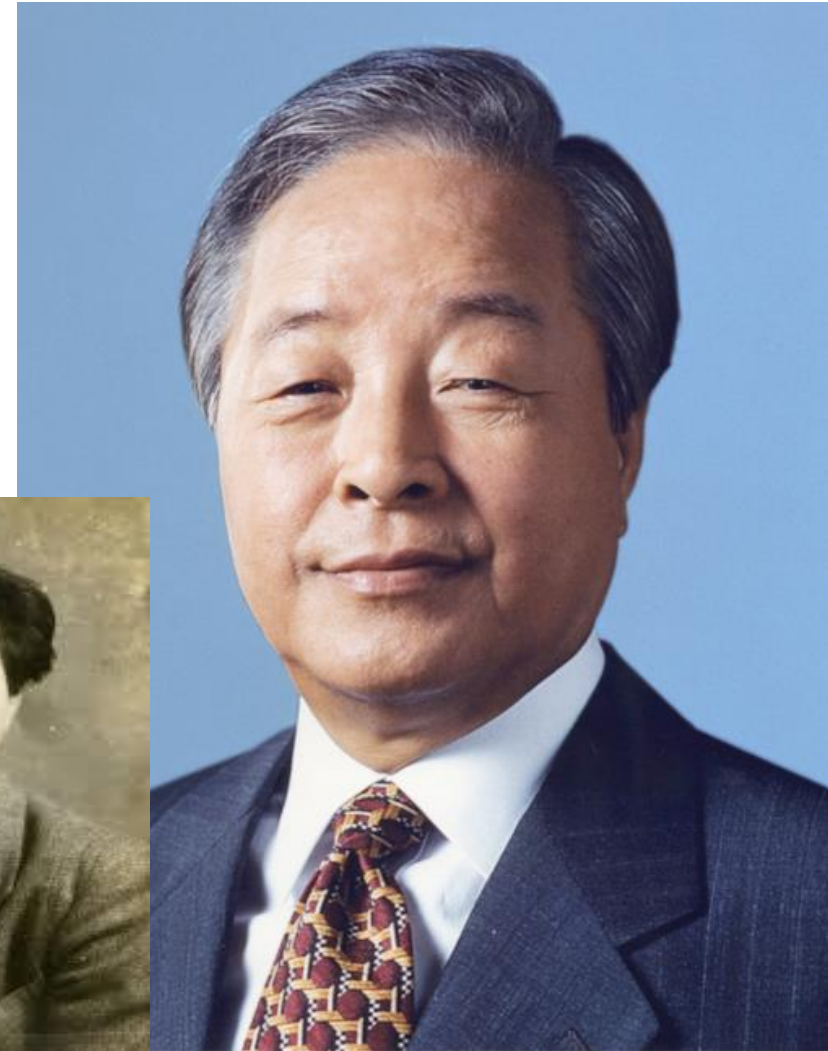
---

- 노태우 행정부의 정책결정 구조
  - 의회 및 정당의 역할이 강화
  - 시민단체 및 언론의 역할 강화
  - 노동조합 등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강화
  - 상대적으로 관료집단의 역할을 축소
    - 기술관료의 역할과 권한 축소
  -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이 크게 강화(여소야대 국회출범)
- 그 밖에 주요 정책
  - 북방정책(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 토지공개념제 도입(토지초과이익제, 개발부담금 등)
  - 신도시건설(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고속전철 건설(KTX)
  - 인천국제공항 건설(국토부의 전략적 사업추진)



## 6. 김영삼 행정부(제6공화국)

- 1993. 2. 25일 취임
- 1993. 3. 군장성 대대적 인사(12일만에..)
- 1993. 8. 금융실명제(긴급명령 제16호)
- 1993.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1993. 공직자윤리법
- 1993. 고노담화 촉진
  - 1993. 대통령지지율 82%까지 상승
- 1996. 총독부 건물 폭파해체
- 1997. 11. IMF(국제금융기구)
  - 국가부도상태





## 6. 김영삼 행정부(제6공화국)

---

- 김영삼 행정부의 정책환경적 특징
  - 시민단체, 노동조합, 각종 이익집단
  -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주창으로 금융실명제 정책
  - 의사회 및 약사회 분업 등 갈등
- 국정이념 이념 및 주요 정책
  - “문민정부”를 기치로 내걸음
  - 군부 권위주의 청산
  - 세계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 OECD 가입
  - 규제정책 폐지 및 금융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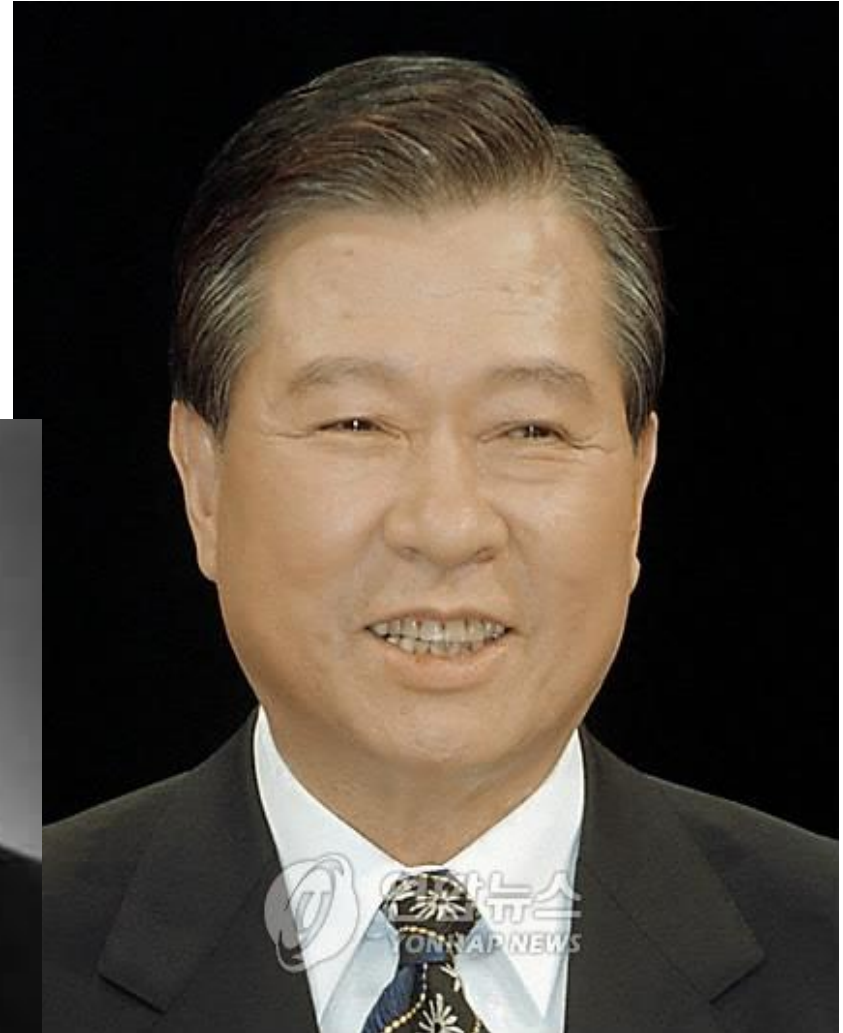
## 6. 김영삼 행정부(제6공화국)

---

- 김영삼 행정부의 정책결정 구조
  - 민주화가 되었으나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 문화
  - 의회와 정당 등 정치체제의 기능 활성화
  - 정책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역할 축소
- 그 밖에 주요 정책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1995.6.27)
  - 금융실명제 전면 추진
  - ‘봉사행정’의 표현 등장 및 작은행정 추구(기구의 개수 축소, 45→39)
  - 종합소득과세, 조세형평성 추구(소비세, 관세)
  - 우루과이라운드: “우리 쌀 지키기”(농수산물), 유통개방

# 7. 김대중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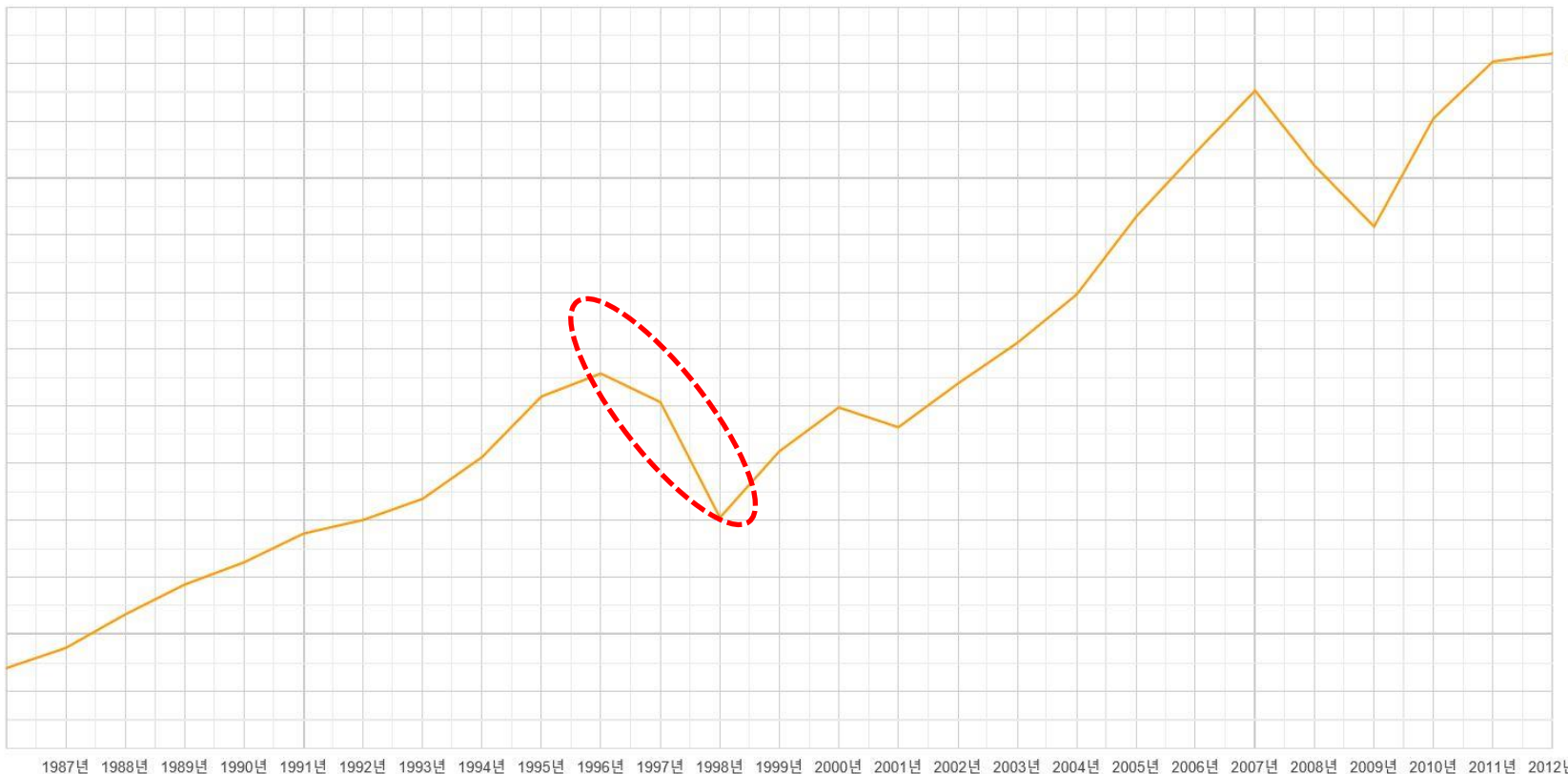
- 1997년 IMF 긴급구제금융(국가부도는 면함영상)
- 1998년 3월 취임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평양방문영상)
- 2002년 12월 노벨평화상
- 2002년 월드컵개최
  - '다시 찾은 자신감'
- 대대적인 공공기관의 개혁
  -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의 도입
-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주도권 획득을 위한 노력



# 7. 김대중 행정부

## ■ IMF금융지원금 요청시기의 경제상황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



“나라에 정말 돈(달러)가 없어요,  
당장 내일,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 상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회고)

“30대 대기업 중 17개 부도”  
(한보, 대우, 기아 등...)

“1년 사이 실업자 124만명 발생”  
(주요 일간지)

4년 만에 IMF 탈출

## 7. 김대중 행정부

---

- 정부 재정의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 민간 부문 대비 정부 부문의 과대 현상  
: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 총고용 대비 정부 부문 인력의 비율이 과다하게 비대해짐
  - 정부의 재정 적자와 공공 부문의 부채 증대  
: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반면 정부 지출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어 지출 재량에 한계를 보임
  -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새로운 역할 정립의 필요  
: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의 역할 강조



## 7. 김대중 행정부

---

- 정부 재정의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 : 독점성,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공무원의 지나친 신분 보호로 인한 인사의 비신축성,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측정의 곤란성
    -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을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
- 정보화에 따른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
-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및 뉴 거버넌스 패러다임 등장

# 7. 김대중 행정부

##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 방북) &

### 노 베 펴 하사



- 50년 만에 남한의 대통령 북측 방문 및 정상간 회담
-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주적 외교를 위한 노력
- 한-미 관계 약화에 대한 우려 발생
- 아직도 정전(휴전) 상태인 남북관계
- 평화분위기와 종전(종료) 상태를 위한 노력
- 2002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



## 7. 김대중 행정부

---

-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국민의 자신감(자존감) 회복



# 7. 김대중 행정부

## ■ 경제정책

### ■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산업성장 및 인터넷 보급 등)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이용자수	163만명	310만명	1086만명	1904만명	2438만명

### ■ 중소기업 벤처에 대한 적극적 지원

표 2-3-14 사업별 IT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1998	1999	2000	2001	계
• IT중소·벤처 창업 지원	22,320	52,400	18,800	12,886	106,406
• 투자위주의 자금 공급 확대	13,500	10,000	55,000	155,000	233,500
• IT중소·벤처 R&D 지원(용자 포함)	497,500	551,000	365,000	370,000	1,783,500
• IT중소·벤처 애로 해소 지원	1,500	3,250	2,175	2,300	9,225
• IT중소·벤처 해외 진출 지원	2,550	2,450	2,920	11,587	19,507
계	537,370	619,100	443,895	551,773	2,152,138



# 7. 김대중 행정부

## ■ 경제정책

표 2-3-12 정부의 IT연구개발 사업별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출연	기술 개발	2,303	1,900	1,970	5,093	3,542	14,808
	인력 양성	1,010	830	690	4,311	2,556	9,397
	표준화	260	210	180	337	330	1,317
	연구기반 조성	430	414	460	1,148	1,025	3,477
	출연 소계	4,003	3,354	3,300	10,889	7,453	28,999
기술개발 투자 · 용자		4,365	4,300	3,700	4,950	3,950	21,265
합계		8,368	7,654	7,000	15,839	11,403	50,264

표 2-3-15 IT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추세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IT사업체 수(개)	10,218	12,382	13,944	17,719	22,127
IT중소·벤처 수	10,055	12,105	13,629	17,404	21,812
신규 IT중소·벤처 수	808	2,050	1,524	3,775	4,408

자료: 정보통신부(2003).



# 7. 김대중 행정부

---

## ■ 김대중 행정부의 정책환경적 특징

- 시민사회 영역 역할과 투입능력 크게 활성화
- 1999년 교원노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합법화
- NGO단체에 대한 지원: 뉴거버넌스 이론

## ■ 국정이념 이념 및 주요 정책

-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위한 시도
- 생산적 복지
  -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적 취약층 증가

##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여전한 제왕적 대통령 문화
- 노사정위원회 등의 위원회 조직의 활성화(뉴거버넌스체계)

# 8. 노무현 행정부

- 2003년 2월 취임(참여정부)
- 탈권위주의적인 대통령/권력기관
  -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
  - 개혁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진보 정치진영의 중앙정치 참여
- 2004년 4월 대통령 탄핵정국
- 보수-진보 진영간 갈등시기
  - 사회단체들의 정파성 증가
- 2006년 한미 FTA추진
-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 기회확대
  - 뉴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기
  - 수도이전/신행정수도 추진



## 8. 노무현 행정부

### ■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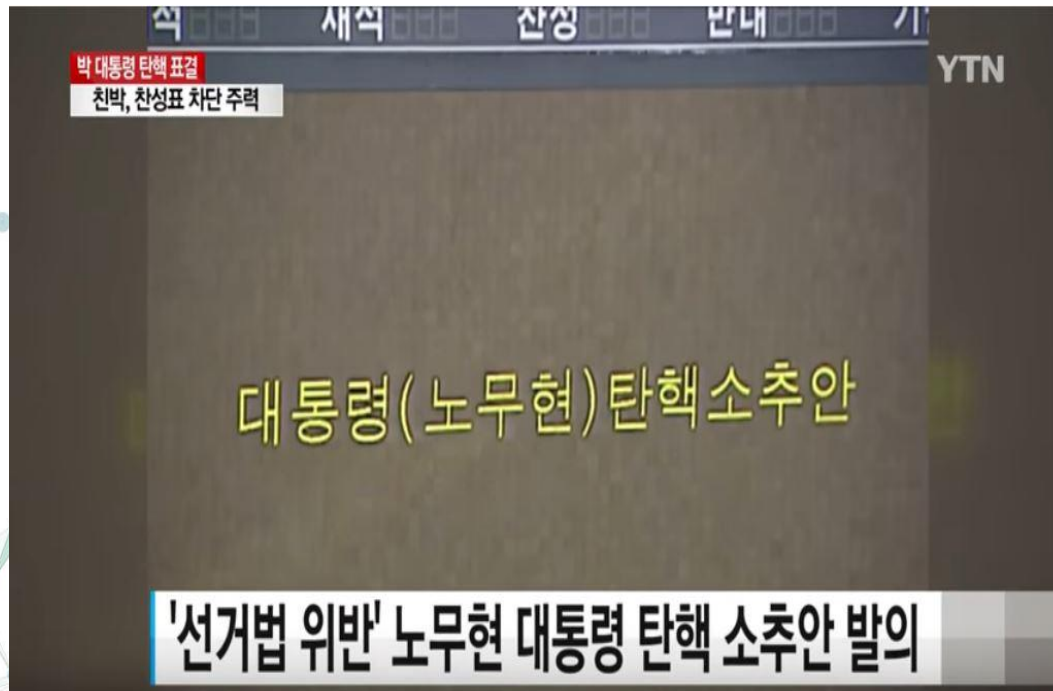
- 2004년 3월 검찰개혁을 위한 대화
- 검사들의 협조적이지 않은 대화
- 검찰개혁 과정의 난항
- 대화를 통한 개혁추진



## 8. 노무현 행정부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2004. 3-4)

- 2004년 3월 12일부터  
63일간 대통령의 직무정지
- 같은 해 5월 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기각



## 8. 노무현 행정부

---

###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말)





## 8. 노무현 행정부

### ■ 신행정수도 이전



-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불가능
- 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접근을 취함

## 8. 노무현 행정부

### ■ 경제성장 및 부동산 규제

- 실질 국내 총생산(고정 가중법 2005년 기준년 변경 적용, 한국은행)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국내총 생산(%)	2.8	4.6	4.0	5.2	5.1

- 강력한 부동산규제와 가격 상승을 막는 다양한 정책 추진

# 8. 노무현 행정부

---

- 노무현 행정부의 정책환경적 특징
  - 시민사회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투입 강화
  - 민주노동당 지지율 13%, 10명의 의원 배출
- 국정이념 이념 및 주요 정책
  - 지역균형발전 적극 추진
  - 수도이전 및 신행정수도 이전
  - 복지정책에 대한 강조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거버넌스 논리의 확대: 인터넷을 통한 소통참여 활성화
  - 직접민주주의 요소: 주민소환제도(선출직 공직자)
  - 인사균형정책: 여성, 지역, 장애인

# 9. 이명박 행정부

- 2008년 2월 취임
- 작은정부 추진
  - 시장중심(경쟁, 효율성)개혁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 2008년 5월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
- 2008년 미국 경제위기 극복노력
- 4대강 정비사업
- 정부의 투명성, 경쟁력 지체
- 언론에 대한 정부 영향력(통제)



# 9. 이명박 행정부

---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41개 기관)
  - 중복설치된 공공기관 통폐합(40개 기관)
  - 면영화, 경쟁도입, 기능 조정(30개 기관)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전 기관)
  - 공공기관 출자회사 지분정리 및 관리개선(273개)
  - 60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11.6% 추진
    -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무건전성 1,800억원



## 9. 이명박 행정부

### ■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파동(2008. 5)



- 정부신뢰 문제 발생
- 정부의 정정 정보 제공에도 온라인의 정보에 더욱 의지
- 정부의 정책집행 불가 상황
- 대통령 국정지지도 급격한 하락 경험

## 9. 이명박 행정부

### ■ 4대강 살리기 사업(2008. 12~ 2012. 4)



-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洲)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
- 임기 내에 업적을 내려는 조급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라는 점에 비판
-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명확하지 않은 소명

# 9. 이명박 행정부

---

- 이명박 행정부의 정책환경적 특징
  - 효율성과 공익가치 균형에 대한 기대, 그러나 대기업 중심
  - 전통적 국정관리체제로의 회귀
  - 언론장악이라는 비판 존재
- 국정이념 이념 및 주요 정책
  - ‘친시장적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법치주의’
  -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감축, 규제 완화
  - 공기업 선진화, 법인세 인하 등 시장 메커니즘 강조
  - 경제성장, 국민소득, 세계 순위 균형 발전 추진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시장중심의 효율성 강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낮은 관심





## 9. 이명박 행정부

---

###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시장중심의 효율성 강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낮은 관심
- 4대강 사업 강력추진
- 국민적 합의나 시민사회 참여 등 절차적 정당성 준수 미흡

# 종합 및 요약

구분	지배 정치이념 및 정책기조	정책결정 구조	정책환경	정책제제의 유형
이승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공과 국가 안보</li> <li>자본주의 경제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위주의 정책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부분 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제 기반 구축기</li> </ul>
윤보선/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사회 건설</li> <li>경제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 및 정당중심(내각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과잉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적 정부 시험기</li> </ul>
박정희(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안보</li> <li>경제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부 엘리트와 기술관료의 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부분의 억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모색기</li> </ul>
박정희(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안보, 경제개발</li> <li>복지사회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부 엘리트와 기술관료의 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부분의 억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li> </ul>
전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안정</li> <li>경제안정 제일주의</li> <li>시장체제로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부 엘리트와 기술관료의 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부분의 억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기</li> </ul>
노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위주의 청산</li> <li>복지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관료의 역할 축소</li> <li>다원화된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태동</li> <li>노동통제의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적 권위주의의 이완/해체</li> </ul>



# 종합 및 요약

구분	지배 정치이념 및 정책기조	정책결정 구조	정책환경	정책제제의 유형
김영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주의의 제도화</li> <li>세계화/개방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제 중심의 권위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거버넌스 체제의 맹아기</li> </ul>
김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포용</li> <li>복지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li> <li>뉴거버넌스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거버넌스 체제의 모색기</li> </ul>
노무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권화/참여민주주의</li> <li>사회 형평성/균형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적/분권적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권화된 정책체제</li> <li>시민사회 참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기</li> </ul>
이명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시장적 발전국가</li> <li>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li> <li>법치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치 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 국정관리 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권위 회복 및 시민사회 부문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 국정관리 체제로의 전환기</li> </ul>